2021 기업윤리 브리프스 <2월>

(주제: 한국판 뉴딜)

COVER STORY

한국판 뉴딜은 경제 전반의 디지털 혁신을 위한 '디지털 뉴딜'과 친환경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그린 뉴딜', 고용과 사회안전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휴먼 뉴딜'을 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세 축의 뉴딜 구조에 따라 핵심과제를 선별하여 실행하도록 합니다. 한국판 뉴딜의 핵심과제를 통해 혁신경제, 탄소중립시대, 복지패러다임 등을 실현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한 정책 방향을 짚어보고 이를 위해 기업이 실천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문가 코칭

'한국판 뉴딜'과 기업윤리

김 용 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Q1. "한국판 뉴딜"은 기업의 능동적 참여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 기업의 역할과 과제는 무엇일까요.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 19 상황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공공 프로젝트로서, 우리 시대의 큰 도전이라 할 수 있는 기술변화와 기후위기에 대해 디지털 전환과 에너지 전환으로 대응하겠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기술과 신산업을 개발·육성해야 하며, 관련 제품과 서비스의 국내 시장 규모를 키워 국제경쟁력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신기술, 신산업, 신시장의 조성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적절하게 리스크를 분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가 정신이란 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덕목이 여기에 포함되지만, 특히 기업의 도전 정신과 사회책임 의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러한 기업가 정신을 찾아보기 힘든 현실입니다.

기업의 도전과 투자를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신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 신기술을 소재로 개발된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 조성이 바로 정부의 역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수소·전기차를 개발하여 상품화했다면 충전 인프라 확충의 노력은 정부가 지원해야 할 몫인 것입니다. 벤처기업을 스케일업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금융지원 역시 정부의 역할에 속합니다.

기업은 무엇보다 과감한 도전정신을 가지고 투자해야 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상업화하기 위한 노력에 충실해야하며, 신산업을 통한 이익은 사회와 공유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전환에 따른 이익은 그 사회의 총체적 노력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이익이 환원되어야만

공공부문이 다시금 그 재원을 가지고 새로운 기술과 산업을 지원하여 새로운 민간기업이 형성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Q2. "한국판 뉴딜"의 핵심과제인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전망을 실현하기 위해 기업에게 요구되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한국판 뉴딜은 결국 기존의 구산업을 점진적으로 신산업으로 전환시키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전환의 과정은 순탄치 않습니다. 구산업의 반발, 구산업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을 낳게 되기 때문입니다. 전환의 과정이 상당한 시간을 두고 이뤄진다는 점에서 미리 대비하고 전망하며 노동자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전환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뿐 아니라 고용 안전망 확충, 사람투자로 대표되는 '휴먼 뉴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업은 청년 인재들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의 기회와 일자리 제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고용 없는 성장'은 경기침체기의 일자리 감소와 경기가 회복되는 시기의 '고용 없는 회복'으로 발생합니다. 지난 연말에 나온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노동력조사를 보면 5인 이상 사업장의 연말 연초 신규채용 규모가 지난 8년 이래 가장 낮은 25만 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학교 교육을 통해 필요한 인재가 공급되지 않는다고 하기보다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과정을 개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일의 사례를 보면 200만 명에 달하는 청년들이 기업이 주도하는 현장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바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필요한 인재를 직접 양성함으로써 청년들에게 지금보다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례돋보기

'그린 모빌리티'의 시대정신과 공정한 전환

"한국판 뉴딜"은 단지 코로나 위기 상황을 돌파하려는 정부의 국정과제나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경제정책만은 아니다. 경제적 혁신과 사회적 개혁을 결합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주체적으로 준비하고 사회경제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을 실행하려는 기획이다.

"한국판 뉴딜"의 두 축인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펼쳐가는 혁신경제의 비전은 무엇보다 '그린 모빌리티'의 출현과 발전 속에서 가시적인 형상으로 다가온다. '그린 모빌리티'는 새로운 수송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영역 전반의 재편을 가속화하는 기술혁신의 실체이자 일상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해주는 아이콘인 것이다.

'폭스바겐' 스캔들과 '그린 모빌리티'

기후위기 앞에 던져진 인류에게 화석연료 기반 자동차 시대와 단절하고 친환경 저탄소 모빌리티를 개발하는 것은 절명의 과제가 되었다. 2025년 노르웨이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유럽의 주요시장에서 퇴출될 내연기관 운송수단을 생산하는 기업들에게 '그린 모빌리티'는 목전에 닥친 정치적 압력이나 사회적 강제에만 그치지 않는다. '글로벌 그린뉴딜'이 '인류세(Anthropocene)'[1]의 생태적 위기를 극복하는 시대정신으로 등장하고, 14%에 달하는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비중을 해결하려는 운명적 기획을 '그린 모빌리티'가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 격변을 관통하고 이질적인 체제를 뛰어넘어 한 세기 이상 독과점 지위를 구가했던 10여 개의 글로벌 완성차들은 강요된 도전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부동의 선두주자였지만 2015년 배기가스 조작 사건으로 생존의 기로에 처한 '폭스바겐'이 로고를 교체하면서까지 필사적으로 기업윤리의 회복을 결단하고, 디젤 내연기관의 개발을 중단하는 대신 향후 5년 동안 730억 유로를 투자하여 75종의 전기차 신모델 출시를 계획하는 것도 '그린 모빌리티'로의 전환을 실체화하는 사건이다. 배터리와 모터에서 동력변환 장치나 충전 인프라에 이르기까지 모빌리티 내부 기관들을 모듈화하여 협력업체들이 수평적인 협업을 역동적으로 구성하는 '그린 모빌리티' 가치 생태계가 글로벌 시장의 핵심으로 출현하고 있다.

이제 '그린 모빌리티'가 만들고 있는 새로운 생태계에서 살아남으려면 이질적인 경쟁자들에 맞서 전혀 다른 규칙으로 진행되는 낯선 경쟁에 뛰어들어야 한다. R&D와 디자인의 핵심역량을 주도하는 혁신기업과 강소 부품 기업이 추구하는 밸류체인 전반의 디지털화와 탈탄소화는 모빌리티 시장 전체를 급진적으로 변형하고 있는 것이다.

---

1) '인류세(Anthropocene)'는 1만여 년 전에서 시작되어 현재에 이르는 지질학적 시대구분인 '충적세(Holocene)'에 비유하여 인간이 더 이상 지구 생태계에서 적응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지구 환경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형하는 주체로 반전된 것을 강조하는 용어로, 환경파괴로 오존층이 사라지고 있음을 최초로 입증한 노벨화학상 수상자 크뤼천이 제시한 개념이다.

'현대-기아자동차 그룹'의 도전과 전략

2030년 '그린 모빌리티' 수요가 20%를 넘나들 글로벌 시장 전망에 맞추어 한국 자동차 산업의 발걸음도 빨라질 수밖에 없다. 완성차 산업을 주도하는 '현대-기아자동차 그룹'이 생산, 고용, 조세 영역에서 제조업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그린 모빌리티'를 중심으로 다양한 후방산업과의 연관 효과를 새로이 설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테슬라'가 25%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독보적으로 유지하며 전기차에만 집중하거나 '토요타'가 수소연료전지차에 초점을 맞추는 것과는 달리, '현대-기아자동차 그룹'은 하이브리드 자동차에서 수소차 그리고 전기차에 이르는 다양한 친환경 모빌리티 개발에 역량을 전개해 왔다. 세계 최초로 양산형 수소전기차를 출시하고 승용 및 상용 수소차에 관한 선도적인 지위를 차지했으며, 전용 플랫폼과 부품을 공용화하여 가격과 성능에서 우위를 확보함으로써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3강(2020년 전반기, 5.8% 점유율)에 올랐다. 뿐만 아니라 전기차 기반 '모빌리티 플랫폼'을 구축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브랜드 경쟁력을 확보하고, 전기차 100만대 생산과 10%의 시장점유율을 목표로 '애플카' 협력 생산을 포함한 다각적인 전략을 시도하였다.

'그린 모빌리티' 생태계와 '부산형 비전'의 공정한 전환

'그린 모빌리티'가 만들어가는 새로운 산업생태계의 생성은 한국 자동차산업 전반에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완성차 기업을 중심으로 1차, 2차 협력 기업 등으로 순차적인 동심원을 형성하며 수직관계로 성장해온 경직된 체계는 내장부품이 전장화되며 협력 기업사가 1/3 이상 축소되는 급격한 변화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지난 해 자동차 산업의 불황과 그린 모빌리티'로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해 위축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공공 부분과 민간 부분이 협동하여 혁신하려는 '부산형 상생 지역 일자리 비전'(20.2.6)이 발표되었다. 이는 한국적 '그린 모빌리티' 생태계 구성에 커다란 의미를 가진다. 중견 리딩 기업인 '코렌스'를 중심으로, 영세하고 경쟁력이 취약한 20여 개의 중소 업체들이 핵심부품인 차세대 전기차 파워트레인을 공동으로 연구·개발·생산하는 혁신 클러스트를 자율적으로 구현하려는 시도로, 그린 모빌리티 변화에 대처하는 새로운 모범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적 투자와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실질적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민간 시장과의 새로운 협력모델을 마련하는 것은 지역산업구조의 재구성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국판 뉴딜"의 실행 전략에만 머물지 않는다. 한국 모빌리티 산업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하여 수평적이고 상생적인 '그린 모빌리티' 생태계를 실현하는 과정은 재벌 중심의 경제 현실을 넘어 동반성장을 지향하는 공정한 전환에 새로운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결국 모빌리티의 대체는 단순한 운송기기의 변형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그린 모빌리티'는 디지털 기술의 과시적 선전물에서 생활공간의 새로운 건축자이자 사회 혁신의 촉매제로 스스로 생성 중이다.

보고서리뷰

'한국판 뉴딜'의 도전과 기업의 실천

-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실행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2021)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 발표(7.14)된 후 다양한 논의가 있었으나 아직 준비 중인 정책의 지향점을 온전히 제시하기에는 다소 역부족이다. 이번 보고서 리뷰에서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실행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2]를 통해 "한국판 뉴딜"의 비전과 핵심과제를 알아보고자 한다.

디지털 뉴딜과 혁신경제

경제 전반의 디지털 혁신을 통해 역동성을 촉진하려는 디지털 뉴딜의 첫 번째 기획인 **'Data-Network-AI(이하, DNA) 생태계 강화'**가 무엇보다 일자리의 파편화나 소멸로 이어지는 고용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려는 정책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빅데이터가 산출하는 경제적 편익에 주목하는 데이터 산업의 발전은 양질의 고용을 창출하는 초석이기 때문이다. 사물 인터넷을 포함하여 경제생태계의 다양한 주체들 간의 데이터 흐름과 연결을 강화하는 플랫폼의 구축이나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자동화 사회로 진전하려는 투자 역시 긴밀하게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다.

'DNA 생태계'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은 '코로나 시대'가 야기하는 현장교육의 부재 위에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핀란드의 선진적 연구사례들을 통해 드러난 디지털 학습프로그램의 상대적 효율성 저하나 미국의 온라인 학습프로그램 MOOC이 백인 고소득·고학력층에 활용되면서 기대와 어긋나게 교육격차를 확대하는 사례들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교육의 확대는 피할 수 없다. 평생교육과정으로 진행되는 개별적인 디지털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결합하여 확산되는 과정도 복지체제의 변화와 함께 계속될 것이다.

전염병 재난 상황에서 더욱 주목되는 스마트 의료의 발전이나 돌봄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비대면 산업 육성'**은 코로나 위기 이전에 이미 공공보건체제의 한계에 직면한 유럽연합 국가들에서 원격의료 솔루션이나 헬스케어의 디지털 변환으로 시작되어 왔다. 하지만 개인 맞춤의 미래 예측과 예방의료 중심의 환자 참여형 의료시스템의 체계화는 디지털 바이오 헬스산업의 발전으로만 끝나지 않으며, 건강취약층에 집중하는 사회적 돌봄 체제의 완성을 목표로 전반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린 뉴딜과 탄소중립시대

경제 기반을 친환경으로 구축하여 탄소중립사회로 진입하려는 '그린 뉴딜'의 실천은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그린 리모델링'**에서 출발한다. 환경과 경제의 이중적 위기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는 전략은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나 민간건축물 지원 사업을 통해 생활공간에 녹색 인프라를 구현하려는 그린 경

2) 유태영 외,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실행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 일자리위원회, 2021.

제의 핵심이다.

'신재생 에너지 확산' 또한 생태적인 발전모델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각국은 이미 탈탄소 에너지산업 발전을 위해 국가적 자원을 집중하거나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공공투자는 경제적 효율성뿐만 아니라 화석연료에너지에서 탈피하고 탈원전을 장기적 과제로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순차적으로 증대되어야한다.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연계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디지털화된 전력 시스템을 위한 **'스마트 그리드 구축'**은 에너지 흐름을 자동으로 모니터링하여 에너지 공급과 수요변화에 유동적으로 반응하려는 네트워크 간의 결합이다. 에너지 전환을 디지털화하려는 제반 정책들이 공적 사업과 민간 투자를 통합하여 지능형 전력체계를 완결하는 것은 '글로벌 그린 뉴딜'의 주요한 대안이자 녹색성장을 향한 거대한 도약이 될 것이다.

'그린 뉴딜' 실행전략 전체를 관통하는 **'그린 모빌리티 확산'**은 완성차 중심의 수직적 계열화에서 수평적이고 상생적인 협력관계로 모빌리티 산업생태계를 변형하는 기술 혁신 속에서만 가능하다. 탄소경제로부터의 탈출이 단순히 운송수단의 대체를 넘어 자율주행 모빌리티와 차량공유 서비스화로 등장하며 사회경제적 체제 전환을 촉진하는 것도 여기에서부터이다.

휴먼 뉴딜과 복지패러다임

"한국판 뉴딜"의 사회적 토대를 마련하여 고용과 사회안전망 체제를 구축하는 작업은 무엇보다 **'플랫폼 노동과 노동권 보호'**에서 시작한다. 디지털 경제의 급속한 발전 속에 뿌리내린 플랫폼 기업의 성장과 플랫폼 노동의 확산은 산업자본주의 시대에 작동해왔던 사회적 계약을 폐기하며 노동권 보호를 새로운 당면 과제로 제기하기 때문이다.

노동자의 인권문제에 대한 사법 판결이나 노동법 체계의 부분적 개정을 넘어 경제적 혁신에 대응하는 안전망 체제의 재구성은 **'『전국민고용보험』과 고용안전망 강화'**로 전면 실행되고 있다. 덴마크 겐트모델을 차용한 '소득중심 전국민고용보험안'이 고용의 회색지대를 포용하려는 것도, 사회보장체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보편적 복지체제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것이다.

따라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뉴노멀을 능동적으로 돌파하려는 **'"한국판 뉴딜"과 사회안전망의 혁신'**은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정당성의 결합으로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노동의 가치화와 사회적 기여에 대한 적절한 보상에서 출발하는 사회안전망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만이 복지체제의 후퇴를 반전시키고 급격한 자동화 사회화가 산출하는 위험을 극복할 수 있다.

윤리경영 가이드

윤리경영의 이해

오늘날 윤리경영은 국민의 기업 윤리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함에 따라 선택이 아닌 필수요건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비즈니스 상황에 더욱 윤리적인 방식으로 대응하며 새로운 기업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기업의 올바른 윤리경영을 위해서는 올바른 기준 확립과 최고경영자, 관리자, 종업원의 책임있는 실천의지가 필요하다. 그러나 윤리경영의 실천을 위한 자원과 인프라 구축이 용이한 대기업과 비교했을 때, 중소기업은 윤리경영 기준을 확립하고 임직원에게 윤리실천의지를 전파하는 데에 다소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이에 '윤리경영 가이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윤리경영의 실천 목적과 실행 방법을 안내하여 중소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지원하고자 한다.

Q. 기업의 윤리경영담당자로서 윤리경영부서에서 임직원 대상으로 기본적으로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최근 사회전반에 걸쳐 기업의 영향력이 커지고 소비자의 생활수준과 의식수준이 높아지면서 기업의 윤리경영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기업의 윤리경영부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 지고 있으므로 윤리경영담당자는 기본적인 윤리경영의 개념과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1) 윤리경영의 개념

윤리경영은 조직이 추구하는 가치를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원칙을 정해 이를 기업의 임직원이 함께 준수하는 경영활동으로 기업이 경제적, 법적 책임 수행뿐 아니라 윤리적 책임까지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대사회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미국 Georgia 대학의 A.B.Carall 교수)

① **경제적 책임:** 이윤창출을 통해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할 책임
② **법적 책임:** 사회가 법을 통해 만들어 놓은 틀 속에서 기업경영을 해야 할 책임
③ **윤리적 책임:** 법적으로 강요되지 않아도 사회통념에 의해 형성된 윤리적 기준을 준수할 책임

(2) 윤리경영의 중요성

미국 보험회사의 관리감독자였던 H.W. 하인리히는 어떤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와 관련된 수십 차례의 경미한 사고와 수백 번의 징후들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1:29:300의 법칙'이라는 통계적 법칙을 소개하였습니다. 하인리히는 보험사의 엔지니어링 및 손실통제 부서에 근무하면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사망자가 1명 나오면 그 전에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경상자가 29명, 같은 원인으로 부상을 당할 뻔한 잠재적 부상자가 300명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이는 큰 사고는 우연히 또는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반드시 경미한 사고들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하인리히의 법칙을 윤리경영에 적용해 본다면, 치명적인 한 건의 비윤리적 행위로 기업이 파산하기 전에 수십 건의 가벼운 규정 위반 등의 비윤리 행위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이전에 경미한 규정 위반행위가 있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윤리경영의 중요성

① 기업으로 하여금 영리성·수익성 중심의 이윤추구 행위를 공익성·사회성과 조화시키는 역할
② 정보체계가 발달되고 기업과 사회 간의 상호의존성이 심화된 사회에서 기업에 대한 신뢰는 수익성과 성장성도 증대시키는 역할
③ 기업의 비윤리적 행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제반 비용 부담을 사전에 방지하는 역할 등

소비자의 윤리의식수준이 높아지면서 이제 소비자는 기업에게 친환경, 고용, 사회문제 해결 등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조와 맞물려 SNS의 발달은 소비자로 하여금 사회적 책임에 충실한 착한 기업과 나쁜 기업을 구분지어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소비 트렌드를 짚어볼 때 기업의 윤리경영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필수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업의 윤리경영 담당부서의 역할도 그만큼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윤리경영 담당부서의 주요 업무

기업의 윤리경영을 위해 임직원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호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윤리경영 담당부서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윤리경영 담당부서 주요업무

① 윤리규범의 제·개정
② 윤리상담, 홍보 및 운영
③ 임직원의 윤리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④ 비윤리행위에 대한 조치,
⑤ 법정의무교육 실시 및 징계

이를 바탕으로 '윤리경영 가이드' 에서는 윤리경영 일선 담당자의 이해와 역할을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윤리경영 가이드	
① 윤리경영 이해와 시스템 구축	- 윤리경영의 이해 - 윤리규범 세우기 - 윤리경영 실천 시스템
② 윤리경영 실천 프로그램	- 이해관계자별 윤리경영 실천프로그램 구축하기 → 고객/종업원/주주 및 투자자 / 협력회사
③ 윤리교육 프로그램	- 법정의무교육 안내 - 청탁금지법
④ 내부고발제도	
⑤ 윤리경영 사례	- 윤리경영(윤리적 행동) 모범사례 - 윤리경영(윤리적 행동) 위반사례

다음 호에서는 우리 회사의 윤리경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첫 단계로 윤리규범 세우기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참고: 글로벌시대의 윤리경영론(탑북스,2019) / 기업윤리(경문사, 2016)

뉴스 클립

국내 동향

1. 권익위, 2020 년도의 5 대 공익신고 선정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 년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거나 사회적 의미가 있는 '올해 5 대 공익신고 사건'을 선정했다.

5 대 공익신고로 선정된 사건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안전분야는 불량 레미콘 제조·납품 사건, 건강분야는 의료기기 불법 제조·납품 및 성형학회, 의사협회 등 해당 제품 사용 사건, 소비자 이익 분야는 가상화폐사업 빙자 유사수신행위 사건, 환경분야는 화학물질 무단방류사건, 공쟁경쟁분야는 제품조달 직접생산의무 위반 사건 등이 선정됐다.

참고: 국민권익위원회, 2021.01.04
링크:
https://www.acrc.go.kr/acrc/cardNews/cardNews.do?command=searchDetailCardNews&menuId=05050605&cardNum=97&currPageNo=1

2. 한국, ESG 1 등급 평가

한국이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1 등급을 받았다. 무디스는 각국의 ESG 수준이 국가신용등급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긍정적'(1 등급)에서 '매우 부정적'(5 등급)까지 5 단계로 나눠 평가했다.

한국은 지배구조에서 1 등급, 환경과 사회는 각각 2 등급 판정을 받았다. 환경은 '탄소 전환', '기후 변화', '수자원 관리', '폐기물 및 공해', '자연 자본' 등 5 가지 세부 항목이 2 등급이다.

참고: 중앙일보, 2021.01.20
링크: https://news.joins.com/article/23974233

해외 동향

1. "유럽에서 공기오염 줄이면 최대 연 12 만 5 천명 살린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수준으로 공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줄이면 유럽에서만 매년 최대 12만5천명의 사망을 막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건강연구소의 논문에 의하면 "연구 결과 공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는 도시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WHO 권고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면 불필요한 사망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지역별로는 스페인, 이탈리아의 일부 지역 등이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꼽힌 반면,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 지역이 공기오염의 사망 영향이 가장 적은 곳으로 나타났다.

논문 저자는 "공기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승용차 등 개인 교통수단 줄이기, 나무와 석탄 연료 사용 금지 및 도심지역 녹색 공간의 조성"을 주문했다.

참고: 연합신문, 2021.01.20
링크: https://www.yna.co.kr/view/AKR20210120086600009?input=1195m

2. IMF "특별인출권 배분, 개발도상국 도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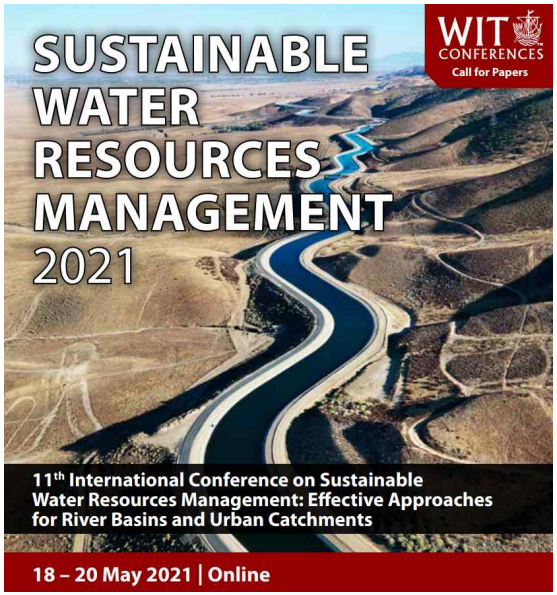
국제통화기금(IMF)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코로나 19로 인해 심화되는 국가 간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구체적인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IMF 총재는 구제 방안의 하나로 IMF 가맹국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담보 없이 IMF가 규정한 가상의 통화를 인출할 수 있는 특별인출권(SDR) 신규 배분을 제안하였다. 이는 국가별 공중 보건 역량 강화, 경제 위기 해결을 위한 자금 제공, 디지털 경제와 녹색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재정적 여유를 제공함으로써 개발도상국들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가 간 빈부격차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참고: 헤럴드경제, 2021.01.19
링크: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119000654

행사소식

Sustainable Water Resources Management 2021



지구상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물과 관련하여 인구의 증가와 불규칙한 강수량, 물에 대한 접근 제한 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한다. 온라인으로 진행 예정.

주최 : Wessex Institute
일시 : 5월 18일~5월 20일
안내 : https://www.wessex.ac.uk/conferences/2021/sustainable-water-resources-management-2021

문화 속 기업윤리

책임, 용기, 연대로 만들어지는 기업윤리
- 영화, '삼진그룹 영어토익반'

88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외환위기를 목전에 두고 3저(저달러·저유가·저금리) 호황으로 고도성장을 누리던 시기. 영화 '삼진그룹 영어토익반'의 배경이 되는 1995년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영화는 입사 8년 차 말단 직원인 주인공이 심부름을 하러 간 지방 공장에서 폐수가 유출되고 있는 것을 우연히 목격한 후 회사가 감추려는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동기들과 함께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영화의 중심 사건인 폐수 방류사건은 1990년대 초 실제로 일어났던 '낙동강 페놀 오염사건'을 모티브로 재구성된 이야기다. 당시 환경처는 해당 문제가 발생했던 회사에 대해 수출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조업 재개를 허용했는데, 보름 만에 유출 사고가 재발한다. 이 사건으로 기업 총수와 환경처 장관은 자리에서 물러났고, 페놀 유출에 따른 건강 이상 등의 부작용은 고스란히 지역 주민에게로 돌아갔다.

영화는 이윤 창출을 위해 조작되고 은폐되는 기업의 비윤리 사건을 통해 오늘날 기업이 갖춰야 할 올바른 환경윤리의 필요성을 일깨운다. 지구 온난화와 이상기후 현상이 전 지구적인 문제로 떠오른 오늘날, 기업은 기업활동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오염 예방과 보호에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기업의 환경윤리 실천은 이제 시혜적 차원의 활동을 넘어 기업이 비중 있게 다뤄야 할 사회책임활동의 하나가 되었다.

폐수 방출 사건이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은폐되는 것을 목격했지만 주인공은 포기하지 않고 이 문제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노력한다. 그리고 주인공이 회사가 폐수 방류량과 유해성 조사 결과를 조작했다는 증거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과정을 그의 동료들이 적극적으로 격려하며 함께한다.

내부고발은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용기 있는 행위이지만, 동시에 조직 내에서는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히거나 내부고발 행위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기에 행동으로 옮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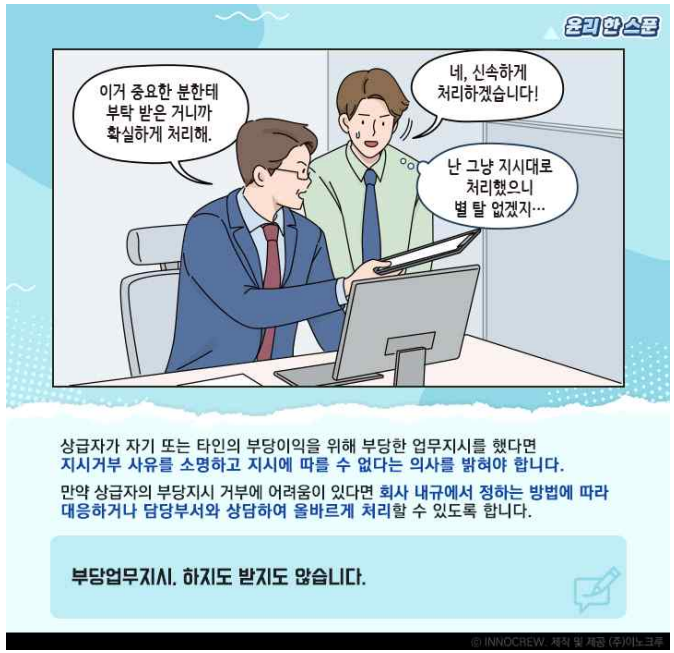
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주인공 역시 내부고발자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사무실에서 책상이 치워지고 '면벽근무' 지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용기를 지지해 준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는 내부고발이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동력으로 작용하는 데에 조직 구성원들의 지지와 연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문제를 은폐하고, 문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묵살하는 것으로 기업의 비윤리 행위가 가려지는 시대는 지났다. 공정과 사회정의 실천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지금, 기업은 조직 구성원과 사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수준 높은 사회책임 의식을 갖춰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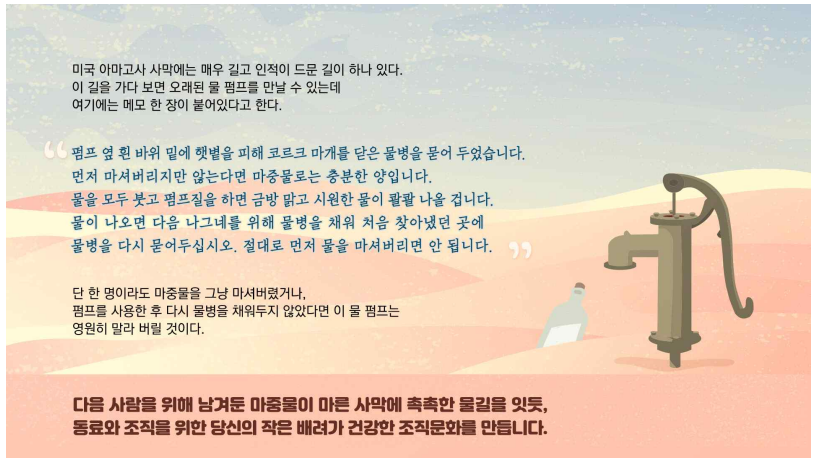
<포스터>

출처 - naver 영화

윤리 한 스푼



공감+



윤리문자

독자 퀴즈

Q 다음 중 '한국판 뉴딜'을 구성하는 핵심전략이 아닌 것은?

① 디지털 뉴딜
② 그린 뉴딜
③ 휴먼 뉴딜
④ 뉴노멀

- **지난 호 정답:** ③
- **정답 제출처:**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실(mail@innocrew.co.kr)
  성함, 연락처(휴대폰 번호)를 보내주세요(22일까지)

정답을 보내주신 분 중 5명을 추첨하여 모바일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상품 발송을 위한 정보로만 활용되며, 추첨 이후 파기됩니다.**

- **지난호 정답자는 길민석님, 차윤희님, 이민호님, 송하윤님, 박경수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